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권고 사항

비공식 번역



**OECD** 법적 수단

이 작업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출판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의견과 사용된 주장이 OECD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와 지도는 영토의 지위나 주권, 국제 국경 및 경계의 경계,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 권한 없이 무료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는 OECD 공식 번역물이 아닙니다. 원문에 기초해 국문으로 번역 되었으며 공식 영문 및 불문 버전은 아래 OECD 웹사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egalinstruments.oecd.org>

## 배경 정보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제안에 따라 2023년 6월 8일 장관급 OECD 이사회에서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본 권고안은 준수국들이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일관되고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지역개발정책 표준의 필요성*

지역 및 지역 내 도시 및 농촌 지역이 국가 경제,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은 전 세계 정부에서 오래 인식되어 왔다. 또한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세계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완화 및 적응에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동시에 OECD 국가 내 지역 간 경제 구조, 성과, 삶의 질 수준도 매우 다양하다. 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이런 다양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지역 간 중대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RDPC는 국가 단위의 성과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결과의 큰 차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입증해 왔다. 고위급 지역개발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최고의 국제 포럼인 RDPC는 지역 및 지방 차원을 포함한 다양한 OECD 회원국에서 수행한 심층 검토와 수많은 출판물을 통해 지난 20년간 지역개발 정책적 사고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이끌어 왔다. 이 과정에서 RDPC는 지역개발정책의 '왜', '무엇을', '어떻게'를 명확히 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의 위기들은 같은 국가 내의 지역들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충격들의 비대칭적인 영향은 일부 지역의 취약성을 조명했다. 더불어, 충격 완화 정책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점을 고려해, 지역적 특색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사실도 보였다. 최근의 위기들은 광범위한 지역적 불평등을 무시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더불어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복잡한 과제와 상충 관계를 관리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지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권고안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세스*

2022년 RDPC는 지난 20년 동안 수집한 증거, 교훈, 정책 사례를 요약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관한 OECD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RDPC는 2022년 5월에 지역개발에 관한 일련의 지침 원칙 개발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 원칙을 OECD 권고안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작업을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과정을 통해 권고안이 개발되었다. 본 권고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RDPC와 다양한 OECD 정책 커뮤니티의 의견, 제안, 견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2023년 3월에 열린 자문 세미나에서 지역개발 분야의 저명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권고안의 주요 안건을 공유했다.

## 권고안의 범위

본 권고안은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설계와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2014년 모든 정부 조직 단위에서의 효과적인 공공 투자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 [OECD/LEGAL/0402]과 2019년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더 나은 미래 구축을 위한 정책 선언문 [OECD/LEGAL/0448] 등 RDPC가 책임지고 있는 기존 OECD 표준 및 도구를 권고안의 기반으로 삼는다. 또한 본 권고안은 RDPC가 승인한 OECD 도시정책 원칙, OECD 농촌정책 원칙, OECD 물 거버넌스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본 권고안에 따르면, 지역개발정책은 장기적, 횡단적, 다층적 정책이며, 모든 지역의 국가 성과 기여도를 높이고 지역 및 사람 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개발정책에 따르면, 지역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은 해당 지역에 내재되어있으며 주민과 지역사회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원주민들은 장소 기반 방식 지역개발의 필수 파트너인데, 일부 준수국들에서는 원주민들이 특히 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은 국가 단위 또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채택될 수 있다.

본 권고안은 지역개발정책의 10가지 상호 보완적인 주요 안건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 전략 설계 및 실행, 2) 적절한 지역 권역 목표 설정, 3) 공동 생산을 위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4) 지역 회복탄력성 강화, 5) 지역 차원 데이터 증진, 6) 건전한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7) 역량 강화, 8) 자원 동원, 9) 청렴성 증진, 10) 성과 관리 육성.



## OECD 권고안

###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10 건

- 성과

- 전략

- 지역 권역

- 공동 생산

- 회복력

- 데이터

- 다층적 거버넌스

- 역량

- 자원

- 청렴성

본 권고안은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가 간의 차이와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하위 정부의 역량 또는 공동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본 권고안은 모든 정부 조직 단위에 적용 가능하지만, 준수국들의 (특히 하위 국가 단위) 역량 및 관심에 따라 준수국 간 및 준수국 내에서 권고안의 적용 사항이 다를 수 있다.

### **다음 단계**

준수국들의 권고안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RDPC는 시행 도구 모음(toolkit)을 개발 중이다. 이 도구 모음은 권고안의 근간이 되는 주요 10건의 시행 방법을 행동지향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지침서 및 실용적인 정보, 관련 모범사례를 담았으며, 준수국들이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동시에 OECD는 관련 국가에 대한 검토, 주제별 작업 및 모범 사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활동과 새로운 동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권고안이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DPC는 2028년에 권고안의 시행, 배포 및 지속적인 관련성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oecd.org/regional/> 를 참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regions@oecd.org](mailto:regions@oecd.org).

위원회는,

1960년 12월 14일에 체결된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제 5조 b)항을 **유념하고**,

공공 투자 및 인프라, 예산 거버넌스, 공공 조달, 정책 평가, 공공 부문 청렴성, 열린 정부, 규제 정책, 공공 고용 및 리더십, 기후 변화, 환경, 디지털화 및 데이터 거버넌스, 기업가 정신,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분야에서 OECD가 개발한 표준을 **유념하고**,

각국 정부들과 함께 타 국제기구에서 지역 기반 정책과 지방 및 지역 당국들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한 작업(표준 포함)을 국제 목표 달성 및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위해 **유념하고**,

많은 국가 내에서 지역 경제 성과와 삶의 질에 크고 지속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며, 기후 변화, 디지털화, 인구 변화 및 세계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다양한 충격과 위기가 국가 내에서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기존의 격차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가 경제,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지역과 그 안의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중요한 기여와 메가트렌드에 대한 경제 및 사회적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지역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경로와 다양한 공간적 배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지역과 장소에 걸쳐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개발정책은 각 장소의 특수성에 맞는 통합 개발 전략을 제공하므로 부문별 정책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책임이고, 정부 간 재정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다층적 거버넌스 관행은 지방분권의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거버넌스 시스템의 일부이며, 따라서 본 권고안은 법적, 정책적, 제도적 틀에 따라 모든 정부 조직 단위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I. 본 권고안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사용된다는 데 **동의한다**:

-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과 주민의 특정 요구와 기회에 맞춘 전략적이고 목표가 있는 공공정책, 투자 및 서비스 제공 조치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지역의 국가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지역 간 및 사람 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횡단적, 다층적인 정책이다.
- **지역** 또는 **장소**란, 국가 내의 공간적 영역 또는 하위 단위로, 외딴 지역, 농촌 지역, 소규모 및 중소 도시와 그 인근 지역, 대형 도심, 근교 및 대도시 지역(도시 및 주변 통근 가능 거리의 지역) 및 그 안의 농촌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규모의 인간 거주지 및 공동체가 있는 국가

내 공간이다. '지역'이라는 용어는 공간적 차원으로 사용되며 어떠한 행정 또는 정치적 실체를 지칭하지 않는다.

- **하위정부**란, 중앙정부 하위의 모든 조직 단위를 뜻하며 이때 지방정부 및 주정부, 기타 조직 단위의 정부(예: 구, 군, 도), 그리고 시/지방/광역 정부가 포함된다.
- **다층적 거버넌스**는 하위 국가 단위의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정부 조직 단위 간, 그리고 민간 행위자 및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비정부 이해관계자 간의 제도적, 재정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부 조직 단위 간의 상호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며, 수직적(다른 정부 조직 단위 간), 수평적(같은 정부 조직 단위 간), 다양한 비정부 이해관계자(시민, 민간 행위자)와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II. 본 권고안을 준수하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하 "준수국")은 만민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장소 기반 지역개발정책을 촉진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상기 취지 하에, 준수국은:

**1. 다음 사항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지역개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 a) 모든 지역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성과,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 회복력, 지역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도록 조성하는 명확하고 차별화된 지역개발 목표를 하위정부 및 지역 사회와 함께 정의한다.
- b) 상호 보완적인 부문별 정책, 투자 및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영토적 관점을 통합하여 상호 강화되고 부문별 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가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 c) 국가 및 국제 단위에서 각 지역의 특정 경쟁 우위 및 절대적 우위와 생산성, 삶의 질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내생적 동인을 활용한다.
- d) 사회적 취약계층, 소수 집단, 또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인구의 특정 요구 사항을 목표로 삼고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역개발정책의 중심에 둔다.
- e) 국제 투자자, 인재 및 방문객에 대한 지역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및 가치 사슬에서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이 건전한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2. 상생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지역내 및 지역간 모든 유형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 조치에 적합한 지역 권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a) 지역 간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결을 반영하는 기능적 영역을 고려하여 하위정부의 기존 행정 경계를 보완한다.

- b) 공동 전략을 포함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재 생산을 강화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경제 및 사회적 기회를 개발한다.

**3.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정 자산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수집하고 공동 생산함으로써 정책 결정 주기 전반에 걸쳐 지역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a) 시민, 시민사회, 민간 부문, 노동 단체, 금융 및 교육 기관, 사회 파트너(social partners)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역, 지방 공동체가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참여 및 심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b) 전략적 소통 채널, 투명성 및 명확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 있는 정보, 데이터 및 증거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한다.

**4.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충격의 비대칭적 영향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정책을 활용한다:**

- a) 녹색 혁신 및 투자 촉진, 국가 하위 단위의 기후 행동 및 자금 조달 촉진, 순환 경제 전략 채택 지원 등을 통해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 및 지역 내 녹색 전환을 지원한다.
- b) 디지털 인프라, 건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모든 곳에서 디지털화의 기회를 포착한다.
- c)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과 유연성을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과 접근성 간의 균형을 관리하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원한다.
- d)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전환 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역개발 목표와 우선순위를 수립한다.
- e) 지역개발정책, 투자 결정 및 공공 관리 관행이 장단기 변화를 더 잘 예측하고 대비하며, 모든 장소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지향적이며 유연하고 민첩하도록 보장한다.

**5. 지역개발정책을 알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권역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지표의 가용성과 품질을 다음과 같이 증진한다:**

- a) 공식 통계 조사, 행정 데이터 및 영토 분류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지역과 국제 표준 및 정의에 따라 인구 통계, 사회 경제, 환경 및 재정 상태, 삶의 질에 대한 국가 하위 단위 지표의 가용성, 접근성 및 세분성을 개선한다.



- b) 인구 변화, 디지털화,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문제, 세계화 등과 같은 글로벌 전환 및 메가트렌드와 관련된 지역개발정책 영역에서 국가 하위 단위 통계 개발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채택을 촉진한다.
- c) 지리공간 데이터를 포함한 스마트, 빅, 오픈 데이터를 하위 국가 단위 데이터 및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신의 그리고 양질의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정책 결정을 내리고,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보장한다.

**6. 일관된 지역개발정책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전한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 a) 서로 다른 지역의 전망과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정책 영역들이 해당 지역의 필요와 영향을 고려하고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 설계 및 시행을 국가 및 하위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기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채택한다.
- b) 국가 및 하위정부 단위에서 부문 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부처 간 위원회 및 프로그램, 공동 투자 기금, 프로그램 규칙의 조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 c) 지역개발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개선하고 허용하기 위해 광역 거버넌스, 도시-농촌 파트너십, 지자체 간, 지역 간 및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한 하위정부 간의 관할권 간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회를 모색한다.
- d) 실험적 거버넌스 접근 방식과 새로운 유형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혁신적인 조정 메커니즘과 상향식 지역개발 이니셔티브를 정부 조직 단위간 및 전반에 걸쳐서 장려하고 채택한다.

**7. 국가 및 하위정부에서의 지역개발정책 설계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전략적, 기술적 역량을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

- a) 현재와 미래의 필요 사항과 난관을 고려하면서, 특히 국가 하위 단위에서 전략 계획, 규제,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프로젝트 평가, 조달, 재정 및 예산, 인프라 투자, 공공/민간 투자 수단, 데이터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파트너십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주도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 b) 지역개발정책 및 조직 목표에 따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경험 공유, 경험 기반 학습, 혁신을 장려하는 등 지역개발정책을 지원하는 학습 문화를 보장한다.

**8. 국가 및 국가 하위 단위에서 지역개발정책에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재원을 다음과 같이 동원한다:**

- a) 지역개발자금을 국가 및 국가 하위 단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에 맞게 조정한다.
- b) 지역개발정책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과정, 특히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 예산 편성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조율되며 일관된 방식으로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한다.
- c) 지역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 제도, 이전 및 균등화 메커니즘, 지역개발기금 등 지역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 도구를 명확히 설명한다.
- d) 좋은 디자인으로 설계되고 지역개발 목표를 지원하는 공공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국가 및 국가 하위 단위의 전통적 자원과 혁신적 자원 간의 상호 보완성을 동원, 통합 및 강화한다.

**9. 공공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국가 및 하위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을 다음과 같이 증진한다:**

- a) 투명성과 개방적인 정부 전략 및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대중의 감시를 촉진하는 책임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 b) 지역개발정책의 영향과 지역개발기금 사용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한다.
- c) 특히 불필요한 규제 또는 기타 행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역개발정책 목표를 지원하도록 보장한다.

**10. 증거 기반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성과 관리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육성한다:**

- a) 현실적이고 명확한 지표 세트를 포함한 강력한 평가 설계를 사용하여 지역개발정책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영향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평가한다.
- b)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얻은 데이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장단기적으로 정책 성과와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전달하며, 지역개발 목표에 비추어 다양한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에 정보를 제공한다.

III.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본 권고안을 홍보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IV. 사무총장에 대하여, 본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V. 준수국에 대하여, 각급 정부에 본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VI. 준수국 외 국가에 대하여, 본 권고안을 고려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VII.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 a) 본 권고안의 시행과 관련된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정보, 경험 및 정책 실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b) 본 권고안을 구현하기 위한 준수국들의 시행 도구 모음(toolkit) 개발 노력을 지원한다.
- c) 본 권고안 도입 후 최소 5년 이내에, 그 후에는 최대 10년 주기로, 본 권고안의 시행, 배포 및 관련성 유지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OECD 소개**

OECD 는 각국 정부가 세계화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특별한 포럼이다. 또한 OECD 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변화와 난관을 이해하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다. OECD 는 각국 정부가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공통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및 국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 유럽 연합은 OECD 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OECD 법적 기구**

1961 년 OECD 가 창설된 이래로, 약 460 개의 실질적인 법적 수단이 그 틀 안에서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OECD 법령(예: OECD 협약에 따라 OECD 이사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안)과 OECD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발된 기타 법적 수단(예: 선언문, 국제 협약)이 포함된다.

시행 중이거나 폐기된 모든 실질적인 OECD 법적 도구는 온라인 OECD 법적 도구 개요에 나열되어 있다. 이는 5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 **결정**은 이사회에서 채택되며, 채택 당시 기권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결정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 **권고**는 이사회에서 채택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권고는 포함된 원칙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나타내며 준수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수반한다.
- **실질적 결과문서**는 OECD 기구가 아닌 개별 회원국이 채택하며, 기구 내 장관급, 고위급 또는 기타 회의의 결과물로 채택된다. 주로 일반적인 원칙이나 장기 목표를 설정하며 엄숙한 성격을 띠고 있다.
- **국제 협약**은 OECD 기구의 틀 안에서 협상되고 체결된다. 국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 **협정 및 양해 등**: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수출 신용에 관한 협정, 국제 해상운송원칙에 대한 이해, 개발원조위원회(DAC) 권고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실질적 법적 수단이 OECD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간에 걸쳐 개발되었다.